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리의 결의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간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날로 깊어 가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이는 한·미FTA 협상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부담을 짊어지도록 하는 일이며, 특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정부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종속적, 굴욕적인 자세로 시한에 쫓겨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의 사회 전반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특히 우리군은 참외소득이 연간 3,000억에 육박하고 축산소득도 연간 1,700억에 달하는 절대적인 농업지역으로서 군 전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분야는 협상이 체결될 경우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민적 합의없이 2007년 3월말 타결을 목표로 졸속협상을 서둘러 진행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결국에는 농업인들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 모두가 삶의 터전을 빼앗길 뿐 아니라 국가 경제기반을 무너뜨려 이 땅의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말 것이다.

이에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극명하게 보여줬듯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하는 한·미FTA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산업 전반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Ⅰ.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결사반대 한다.

Ⅰ. 한·미FTA 협상은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므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Ⅰ. 정부는 한·미FTA 협상체결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히 농업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협상진행 전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6년 11월 일

경상북도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